

제4장

표준화의 지적재산권

제1절 표준과 지적재산권

1.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연관성

가.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현대시대에 있어서 표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표준은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핵심역할을 하며 디지털경제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표준은 정부나 산업그룹 등 공식적인 기구가 정하는 공식표준(de jure standard)과 특정의 기구가 제정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성공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표준인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분야에서 공식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표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표준, 특히 공식표준의 제정은 국내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표준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은 발명을 장려하여 사회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창작을 자극하여 사회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곧 지적재산권은 발명자나 저작자 등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동기(incentive)를 제공하고, 이에 의하여 행하여진 발명이나 창작에 기초하여 일반인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대의 기술발전과 문화향상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들은 발명이나 창작을 자극하기 위한 법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분류되는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industrial design), 상표(trademark),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억제 등이 포함되며, 저작권에는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으로 새로이 등장한 것으로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 design)에 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제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나. 표준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과 지적재산권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표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표준이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표준을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에는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인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느 하나의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의 숫자가 몇 백개가 될 정도로 정보통신표준과 지적재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성질상 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주로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한정되며 최근에는 저작권,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software copyright)의 내용이 표준에 포함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제상 발명과 고안(考案)은 구별되지만, 양자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고안도 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표준의 내용으로 제정될 정도의 기술은 대부분 발명에 해당될 것이므로 표준과의 관계상 고안의 중요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따라서 표준과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은 특허이며 특허받은 발명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중인 발명도 표준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표준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i)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예컨대 특허받은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ii)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특허를 어떻게 조기에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 (iii) 특허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iv) 표준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허의 사용허락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표준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표준제정기관들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ISO는 기술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적재산을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ANSI도 기술적인 이유에 의하여 지적재산을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ETSI는 유럽의 원격통신 분야의 기술적인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는 해결책에 표준이 기초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이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취급요령도 표준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규정함으로써 표준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표준제정기관과 지적재산권정책

전세계적인 표준제정기관과 각국의 주요 표준제정기관들은 표준의 제정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방침(IPR Policy)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가이드라인(Guidelines)을 채택하는 기관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방침과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ITU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표준제정기관들의 지적재산권 정책방침은 다음과 같다.

- (a)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ETSI Rules of Procedure의 ETSI IPR Policy¹⁾
- (b)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²⁾
 - ① 특허정책방침 :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American National Standards) Sec. 1.2.12
 - ②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ANSI Patent Policy An Aid to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Standards Development In Fields That May Involve Patented Technology
- (c) ISO/IEC: ISO/IEC 지침(ISO/IEC Directives)
 - Part 1: Procedures for the technical work³⁾
- (d) ITU
 - ① 특허정책방침 (ITU-T Patent Policy)⁴⁾
 - ② 특허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ITU-T Patent Policy)⁵⁾
 - ③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ITU-T Software Copyright Guidelines)⁶⁾
 - 2003년 6월 15일 ITU-T TSB Director의 IPR Ad hoc Group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

1) <http://www.etsi.org/aboutetsi/home.htm>.

2) <http://www.ansi.org>.

3) <http://www.iso.org/iso/en/stdsdevelopment/whowhenhow/directiv.html>.

4) <http://www.itu.int/ITU-T/dbase/patent/patent-policy.html>.

5) <http://www.itu.int/ITU-T/dbase/patent/patent-policy.html>.

6) <http://www.itu.int/ITU-T/dbase/copyright/index.html>.



2.0판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

(e) 일본의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⁷⁾

- ①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⁸⁾
- ②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운용세칙⁹⁾

(f)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표준절차(The Internet Standards Process, RFC 2026)¹⁰⁾ 제10조(지적재산권)

(g)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 JEDEC Manual of Organization and Procedure의 JM21-L¹¹⁾; Notice, Section 5.1, 8.2, 8.3, Anex A & B

(h)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취급요령¹²⁾

이러한 국제·국내표준제정기관들의 특허정책방침 내지 지적재산권정책방침 및 가이드라인은 주로 표준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유도, 사용허락의 조건, 사용허락의 거절에 대한 대처, 표준의 제정 후에 인 지된 지적재산권의 처리, 표준제정기관의 개입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표준의 제정과 지적재산권의 공개

1. 표준의 제정과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의 필요성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조기에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표준과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을 조기공개함으로써 표준제정기관이 그 존재를 인식하여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제정의 적절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표준을 실행하려는 자는 표준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위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으며, 표준제정기관이 사용허락에 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표준을 실행하려는 자는 다른 실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에 포함되는 지적재산권을 조기에 공개시키는 문제는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조기에 공개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지적재산권자나 표준을 제안하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공개할 의무와 관련없이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발생한다.

2. 공개유도 및 의무

표준제정기관의 성질상 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자로서 하여금 지적재산권을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표준제정기관은 없다. 그러나 조기공개는 표준의 제정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표준제정기관은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를 유도하고 있으며, 표준제정기관의 유도 내지 강요와 관계없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표준제정기관들이 표준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조기에 공개할 것을 유도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 선의에 의한 조기공개

대부분의 표준제정기관들은 지적재산권을 공개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ANSI와 ETSI의 경우 조기공개를 유도하지만 표준개발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특허에 대하여 탐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ITU-T의 경우, 특허권의 공개시점을 “처음부터(from

7) <http://www.ttc.or.jp/e/intro/rules/ru6/index.html>.

8) (社)情報通信技術委員会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基本指針(平成元年5月18日 理事會決定, 平成13年10月24日 理事會改正, 平成14年3月28日 理事會改正, Th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s Policy for the Handl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9) 工業所有權等の取扱いについての運用細則(平成14年5月27日)(Operation Procedures for the Handl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May 27, 2002)(이하 운용세칙).

10) <http://www.ietf.org/rfc/rfc2026.txt>.

11) <http://www.jedec.org/Home/manuals/JM21L>.

12) http://www.tta.or.kr/Home2003/standards/joining_rule02.jsp.

the outset)”라고 함으로써 특허권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빨리 공개될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선의 노력(best effort)”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역시 특허를 검색할 것을 요구하는 아니다. TTA의 경우,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표준안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협회 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특허정책방침 제3조),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보를 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한 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ETSI의 공개의무

ETSI는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에 대하여 비교적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ETSI의 각 회원사는 自社가 알고 있는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ETSI에 적시에 알려주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표준 또는 기술명세를 위하여 기술적인 제안을 하는 회원사는 그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필수적일 수 있는 회원사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ETSI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IPR Policy 제4조), “회원에 의한 Policy의 위반은 ETSI에 대한 회원사의 의무위반으로 간주되며, ETSI 총회는 ETSI의 규정에 따라 Policy를 위반한 회원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IPR Policy 제14조).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IPR Policy의 위반이 되는가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통지에 대한 회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ETSI의 규칙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표준제정기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교적 강경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ETSI의 경우, 비록 계약위반으로 처리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형식을 취하지만)은 표준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개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의 강제는 결점을 가지거나 내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표준제정기관이 모든 회원사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거나 회원사들이 표준제정기관에 순응할 정도가 아닌 경우이

다. 곧 표준제정기관이 지적재산권을 공개하지 않은 회원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공개의 강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표준제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표준제정기관이 회원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회원사가 표준제정기관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국제적 표준제정기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국내 표준제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회원사가 표준제정기관에 의한 공식표준이 아니라 사실표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표준제정기관에 의한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다. 지적재산권 집행의 불인정

표준제정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는 국가로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곧 지적재산권의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표준제정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는 것이 아니며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곧 1996년의 In re Dell Corp. 케이스¹³⁾에서 VL-Bus 디자인표준과 관련된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Dell 컴퓨터사에 대하여 특허권의 집행을 배제시킨 케이스로서, 오늘날 표준의 제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공개를 강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케이스에 의하여 미국은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공개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자에게 가장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3. TTA의 지적재산권의 인지통보

TTA의 경우 표준제정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공개나 검색을 강제하지 않지만 지적재산권취급요령에서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산권의 인지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곧 TTA의 지적재산권취급요령에 의하면 표준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13) 121 F.T.C. 616, 1996 FTC LEXIS 291(1996)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인지통보서)에 따라 해당 표준과 해당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협회 총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제3조). 만약 표준안을 제안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표준의 채택후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이를 지체없이 협회총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이와 같이 통보에 의하거나 협회총장이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자에게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제9조 제3항),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제9조 제4항).

제3절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

표준제정기관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표준을 실행하려는 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용조건을 알 수도 있으며 표준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관련 표준제정기관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ETSI와 ITU이다.

2. ETSI의 데이터베이스

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TSI의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¹⁴⁾는 ETST의 표준에 필수적이거나 필수적일 수 있는 것으로서 ETSI에 통지된 특허나 출원중인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ETSI가 수령한 정보에 바탕을 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11월 3일 현재 ETSI의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는 79개 회사간에 43개의 프로젝트에서 7,058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이용조건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이 표준이나 기술명세와 관련된다는 것을 ETSI가 주의하게 된 경우, ETSI의 사무총장은 그 IPR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철회할 수 없는 사용허락을 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지적재산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IPR Policy 제6조 제1항). 회원사에 의하여 통지된 IPR로 이루어진 ETSI의 IPR 데이터베이스는, 달리 정하여지지 않는 한, 지적재산권자가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른 사용허락할 의무와 함께 ETSI에 통지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검색방법

ETSI의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IPR Database)는 ETSI가 수령한 정보에 기초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곧 회사명칭, 등록국가, 프로젝트의 명칭, 출원번호, 특허번호, 특허의 명칭, ETSI에 대한 선언 일자, ETSI Deliverable, 특허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 등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회사명, 등록국가, ETSI에 대한 선언일자, 출원번호, 특허번호, 특허명칭, ETSI Deliverable에 따라 유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도 회사명칭, 등록국가, 프로젝트의 명칭, 출원번호, 특허번호, 특허의 명칭, ETSI에 대한 선언 일자, ETSI Deliverable, 특허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주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각기 원하는 것만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라. 정보내용의 유효성, 책임

ETSI가 수령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대하여 ETSI가 그 유효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확인된 특허나 출원중인 특허가 ETSI의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ETSI가 체크한 것이 아니다. 또한 ETSI가 특허나 출원중인 특허가 실제로 필수적인지 또는 필수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ETSI가 조사하거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필수적이거나 필수

14) IPR in ETSI Deliverables, <http://webapp.etsi.org/IPR/home.asp>

적일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존재에 대하여 ETSI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2. ITU-T Patent Statements Database

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ITU-T의 TSB는 표준을 제정하고 ITU-T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¹⁵⁾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ITU-T의 스터디그룹의 표준제정행위에 참여하는 ITU-T의 운영진이나 민간기업 등이 TSB에 통지한 정보, 곧 TSB에 대한 특허선언서(Patent Statement)로 구성된다.

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ITU-T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권고안의 번호, TSB에 통지한 특허선언서의 번호, 특허권자 및 주소, 특허권자의 전화번호, 특허권자의 팩스번호, 특허의 사용허락에 관한 조건 및 기타의 언급, 특허권자가 ITU-T의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에 대하여 사용허락하는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ITU-T에 대한 특허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중의 하나, 특허의 명칭, 특허번호, 특허가 허여된 국가, 특허선언서의 수령일 등이다.

다. 정보내용의 유효성

ITU-T의 특허데이터베이스는 ETSI의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관하여 정확하거나 완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TSB에 통지된 정보를 반영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특정의 ITU-T의 권고안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에 대한 사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신뢰할 수는 없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ITU-T 권고안을 실행하려는 자가 특허에 관한 선언을 TSB에 통지한 업체와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라. 사용허락의 조건

권고안에 포함된 특허의 소유자가 ITU-T의 권고안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떠한 조건에 따라 특허를 사용허락하는가에 관하여 TSB에 대한 특허선언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곧 (i)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따라서 특별한 조건에 제한되지 않거나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없이 누구든지 권고안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ii)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와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특허받은 기술에 대한 사용허락을 협상하고자 하는 경우, (iii)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사용허락을 위한 협상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으며, 마지막의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허선언서(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 사용허락의 구체적인 내용

표준제정기관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제통신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의 이해사항인 통신의 호환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상업적인 남용(abuse)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통신표준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권고안이나 권고안의 실행이나 이용에 대한 정보는 누구든지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표준제정기관의 목표는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의 소유자가 특허를 상업적이거나 독점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에 포함된 특허의 구체적인 사용허락이나 사용료(loyalty) 등은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당사자(특허권자 및 권고안을 실행하려는, 곧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맡겨져 있다.

제4절 표준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1. 표준과 저작권

그동안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주로 특허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저작권, 특히 소프트웨어와

15) ITU-T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Database, <http://www.itu.int/itudoc/itu-t/patents/database/pat-list.pdf>;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Database, <http://www.itu.int/itudoc/itu-t/patents/database/gen-list.pdf>.



관련된 저작권도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곧 권고안을 제안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코드(software code)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현재 저작권이 표준과 관련되는 쟁점을 다루고 있는 주요 표준 제정기관으로는 ITU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ITU는 표준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하여 1990년대 말부터 연구해 왔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ITU-T Software Copyright Guidelines, Issue 2.1.1-March 2005)을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표준의 제정과 관련되는 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TU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표준제정기관들이 저작권,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표준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TTA도 이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표준포함의 억제

저작권은 특허와 그 보호대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범위도 달리한다. 저작권은 사실, 아이디어,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표현된 것만을 보호한다(idea/expression dichotomy). 뿐만 아니라 일정한 아이디어나 기능을 표시하는 방법의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표현조차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merger doctrine). 따라서 아이디어나 기능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방법(곧 대체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점이 표준관련정책에 있어서 특허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게 된다. 곧 특허의 경우에는 표준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특허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허권도 저작권보다 더 배타적이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표준을 이행할 수 없음에 반하여,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곧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표준의 대상이 된 경우, 그 특정의 소프트웨어와 경쟁을 하며 이와 호환성있는 소프트웨어, 곧 대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소프트웨어가 표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표준제정기관이 그 소

트웨어를 표준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ITU는 대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ITU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목적 코드(object code)가 권고안에 절대로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ITU는 특정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권고안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어야 하고 Study Group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ITU는 표준화 이전에 대량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package)는 ITU 권고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TTA도 특허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억제되어야겠지만,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표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가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 이에 대한 표준기관의 정책방침은 특허와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ITU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일정한 절차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전반적으로 Study Group이 소프트웨어를 권고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자는 제안을 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TSB에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락선언서(Software Copyright Licensing Declaration)를 작성하며, TSB는 사용허락선언서를 소프트웨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Software Copyright Database)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권고안에 포함될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자는 제안을 하는 때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락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락선언서에 표시된 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용허락조건은 (i)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포기(누구든지 자신의 위험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특별한 조건 또는 이용료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락

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ii) 이용자로 하여금 ITU-T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기간동안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이용 및/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TU가 전세계적, 비차별적으로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ITU에게 소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 (iii)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상호성에 기초하여 ITU-T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기간동안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이용 및/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모든 이용자들에게 전세계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무료로 이용허락(이용허락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며 이용자들은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음), (iv)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상호성에 기초하여 ITU-T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기간동안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이용 및/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모든 이용자들에게 전세계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무료로 이용허락(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 부과되며, 이용자들은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ITU-T와 관계없이 행하여짐), (v)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상호성에 기초하여 ITU-T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기간동안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이용 및/또는 배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전세계적,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이용허락(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 부과되며, 이용자들은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ITU-T와 관계없이 행하여짐), (vi)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위의 어느 조건에 따라서도 이용허락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4. ITU-T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ITU-T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의 사용허락 선언서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권고안의 번호, ID 번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접촉 정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선언서에 선택한 사용허락조건, 다른 SDO에 대한 사용허락,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버전, 사용허락조건에 선택과 관련된 추가 문언,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락선언서의 수령일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6개

의 이용허락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5절 특허풀과 특허플랫폼

1.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의 필요성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곧 특허가 서로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기술을 실시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중복되는 특허권으로 인하여 기술의 실시는 봉쇄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i) 중복되는 특허를 하나로 묶어서(pool) 단일의 실체(entity)가 보유하게 하거나, (ii) 특허권자가 다른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서로 사용허락을 하는 것이다.

특허가 중복된다는 것은 예컨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특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통신분야에서는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여러 명이 중복되는 특허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정보통신관련 표준이 제정되는 경우 그 표준은 많은 수의 특허와 연관되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수의 특허의 내용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표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들은 특허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특허풀(patent pool)과 특허플랫폼(patent platform)이다.

2. 특허풀의 의의

특허풀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허락하기 위하여 단일의 공동적인 주체에 특허권을 이전시키는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특허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하여 구성된다. 첫째, 여러 가지의 특허권을 중앙의, 독립된 실체(entity)에게 통합시킨다. 이러한 실체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보통 파트너십이나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한국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데, 이 회사는 여러 개의 특허가 한 데 묶여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며,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사용허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특허풀은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고 사용허락으로 인한 사용료수입을 분배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 사용료를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허풀에서는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분배를 많이 하기도 하며 다른 특허풀에서는 사용료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조 내지 체계는 어떠한 특허풀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가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특허풀의 장·단점

특허풀은 기술의 발전을 봉쇄하는 특허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소송비용을 절약하게 하며, 네트워크에 의한 외부효과를 증진시키며, 특허청구범위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며, 풀의 구성원에게 위험을 분담시키며, 소규모 기업의 성공을 촉진시키는 등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특허풀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할 수 있으며, 무효인 특허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을 제거시킬 수 있으며, 패키지에 의한 라이선싱(package licensing)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을 사유재산화시킬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서도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반독점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진다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4. 특허풀의 예: MPEG LA

현대적인 특허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MPEG LA (Moving Pictures Expert Group Licensing Administrator)¹⁶⁾이며, 이 특허풀은 1997년 6월의 서한(business letter)에서 미국 법무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을 사실상 승인받은 것이다. MPEG LA는 MPEG-2 규약(protocol)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특허에 대한 권리를 묶기 위하여 설립된 책임제한회사이다. MPEG LA는 전세계적으로 Canon, 미국의 콜럼비아대학, 프랑스의 CNET, 일본의 Fujitsu, Hitachi, NTT, Sony 등이 보유하고 있는 550개 이상의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46개의 미국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 등 24개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MPEG LA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MPEG-2 표준을 실행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패키지로 사용허락을 하고 있으며, 이 패키지는 MPEG-2에 대한 필수적인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특허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인 특허는 모두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어 있다. MPEG LA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는 필수적인 특허이며, 필수적인 특허는 '특허를 허여한 국가의 법에 의하면 MPEG-2 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방법에 대한 모든 특허'로 규정되어 있다.

MPEG LA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MPEG LA 특허풀은 MPEG 표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대부분의 특허에 대하여 단 하나의 사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수적인 특허권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MPEG LA는 필수적인 특허의 소유자들간의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MPEG LA에 의한 특허풀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계약으로 구체화된다.

- (a) 사용허락자들간의 계약(Agreement Among Licensors)
이에 의하여 사용허락자들은 공동의 사용허락관리회사(License Administrator)를 통하여 자신들의 필수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분야, 사용료의 액수와 할당, 일괄적으로 사용허락할 특허(portfolio, 이하 포트폴리오)에서 특허를 추가하거나 삭제시키기 위한 절차 등의 기본적인 항목에 대하여 합의한다.
- (b) 사용허락자들과 MPEG LA간의 사용허락관리회사에 대한 계약(Licensing Administrator Agreement)
이에 의하여 MPEG LA는 포트폴리오를 MPEG-2 이용자들에게 사용허락하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수입을 배분하게 된다.
- (c) MPEG LA에게 포트폴리오 사용허락을 부여하기 위한 각 사용허락자의 사용허락
- (d) 포트폴리오 사용허락 자체

16) <http://www.mpegla.com>.

5. 특허플랫폼

가. 의의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허락받는 방식으로는 특허 풀 이외에 특허플랫폼(Patent Platform)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특허플랫폼의 유일한 예는 제3세대 특허플랫폼[(Third Generation(3G) Patent Platform, 이하 3G3P)이다. 특허플랫폼에서의 플랫폼은 의미 그대로 Platform(정거장)으로서,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허락하는 이전의 시스템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매우 복잡한 다수의 표준과 다수의 기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곧 3G 시스템을 생산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 필수적인 특허를 인증하고, 필수적인 특허를 지정하고 사용허락하기 위한 것이다.

나. 특허풀과 Platform의 필요성

특허플랫폼의 의미는 특허풀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허풀은 보통 비교적 제한된 수의 구성원(곧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이 필수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으로 이루어지며, 역시 비교적 적은 수의 필수적인 특허와 단일의 제품에 적절하며,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허풀은 일정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하여 그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지만, IMT 2000과 같은 매우 복잡한 기술과 많은 수의 표준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매우 복잡한 표준과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3GPP이다.

mobile communication systems]에 의하면 무선에 의한 많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3G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에 대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는 100개 이상의 회사들에 의하여 소유되어 있다. IMT-2000 기술에 대한 다섯 개의 3G 표준 중 W-CDMA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GSM의 경우 필수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20개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IMT-2000에는 상당수의 기술 및 필수특허가 연관되는 것이다. 3G 시스템은 수많은 기술과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매우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특허권과 연계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을 사용허락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3G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3G3P이다.

3GPP는 3G 시스템을 생산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를 평가(evaluation) · 인증(certification) · 확인(identification) · 사용허락(licensing)하기 위한 3G 산업계가 정의한 접근방법이다. 곧 3G 특허플랫폼은 회사와 같은 법인의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3G 시스템을 위한 필수특허에 대하여 사용허락하기 위한 체제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3G 특허플랫폼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명세서(Platform specification)라 할 수 있는 서류에 정의된 조직에 의하여 모든 기능이 수행된다. 곧 해당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는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되며, 표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 특허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 3G 표준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허에

〈표 1-4-1〉 특허풀과 특허플랫폼의 비교

	특허풀	특허플랫폼
구성	사용허락자들만 구성	사용허락자와 사용권자 모두에게 개방
외부에서의 사용허락	독립된 실체에 의하여 사용허락	플랫폼과 관계없이 사용허락 가능(비배타성)
양도여부	특허권을 독립된 실체에 양도	특허권을 플랫폼에 양도하지 않음
포트폴리오	특허권들을 하나로 묶어서 포트폴리오로 일괄 사용허락	특허권들이 한 데 묶이지 않으며, 사용권자의 특허선택
사용허락 주체	독립된 주체와 하나의 사용허락계약	사용허락자와 사용권자 양자간의 사용허락계약
사용허락 계약	협상의 여지가 없음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사용 허락계약의 선택 가능

다. 3G3P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Third Generation(3G)

대한 사용허락을 획득하려는 자는 어떠한 특허가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필수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필수특허의 특허권자와 이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획득



하려는 자는 “표준적인 사용허락(Standard License)”을 이용하거나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표준적인 사용허락과 다른 조건의 사용허락을 협상할 수 있다. 따라서 3G 특허플랫폼에 의하여 전 세계의 기술사용자들은 기술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기술에 대한 필수특허를 사용허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3GPP는 IMT-2000 기술에 대한 다섯 개의 3G 표준 중에서 1개 이상의 표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특허를 지정, 가치평가, 인증하며, 사용허락자와 사용권자가 3G 특허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3GPP에는 단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실체들은 Platform Specification에서 명시된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러한 기능과 다섯 가지의 IMT 2000 기술간의 경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GPP는 5개의 별개의, 독립적인 플랫폼 회사(플랫폼회사)를 통하여 필수적인 특허를 사용허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5개의 회사들은 5개의 3G 기술을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사용허락을 관리자(Licensing Administrator, LA)를 두고 있고 별개의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회사의 구성원은 Partnership이 처음 선정한 2개의 필수특허 소유자와 그 이후 필수적인 특허를 제공한 자들이다. 각 플랫폼회사는 자신의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사회는 각 사용허락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사용료와 사용허락의 조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각 플랫폼회사의 사용허락기능은 자신의 LA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것은 사용허락기능이 매우 민감한 성격을 가진 기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LA는 일반적으로 사용허락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개의 플랫폼회사는 몇 가지의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 ManCo), 공동의 관리회사(Common Administrator, CA) 및 평가서비스제공사(Evaluation Service Provider, ESP)에 의하여 조정된다.

2004년 10월 현재 W-CDMA 플랫폼회사(Platform WCDMA)는 W-CDMA의 특허사용허락 프로그램(W-CDMA Patent Licensing Programme)에 의하여 3G 터미널 제품에 대한 사용허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곧

W-CDMA FDD를 대하여 인증된 필수특허를 모두 묶어서 사용허락계약(Joint License Agreement, JLA)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플랫폼과 관련되는 회사로는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ETRI), Fujitsu, KPN, NEC, NTT DoCoMo, Mitsubishi, Siemens 등이다.

3G Patent Platform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곧 미국 법무부는 서한(business review letter)에 의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유럽연합은 3G Patent Platform의 독점법위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법위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6절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는 표준의 제정 및 실행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양자의 연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표준의 제정,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표준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한국의 TTA는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이 조기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TA의 지적재산권 취급요령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TTA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의 공개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표준제정과정에서 고의로 지적재산권을 공개하지 않고서 제정된 후에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반독점행위로서 제재를 가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과 지적재산권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거나, 이를 인식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표준과 지적재산권간의 관계에서 정보통신 기술협회의 역할을 홍보하거나, 회원사에 의한 협력을 강화하거나 회원사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공개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과하거나, 지적재산권의 통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표준을 공개하는 약속서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

게 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취급요령보다 좀 더 상세하면서도 정식의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적재산권 정책방침을 채택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정책방침에는 표준관련 특허정책의 천명, 조기공개의 유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탐색의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

사용허락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락의 상호성,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통신기술협회의 책임, 공개를 위한 확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적재산권자에 의한 사용허락의 거절, 표준의 채택후에 인지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표준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의 표시 및 경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